

# 탈냉전과 ASEAN의 지역안보전략

— 한국안보를 위한 합의\* —

변창구\*\*

- I. 서론
- II. 탈냉전과 전략환경의 변화
- III. 아세안의 대응과 지역안보전략
- IV. 아세안 안보전략의 특성 및 평가
- V. 한국안보를 위한 합의
- VI. 결론

## I. 서론

오늘날 제3세계의 가장 성공적인 지역협력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1999년 4월 마침내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창설 30여년만에 '아세안-10'을 달성하여 동남

\* 본 연구는 1999년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동남아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당시 유익한 논평을 해 준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의 Mohtar Mas'oe'd 교수에게 감사 드린다.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아지역은 물론이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정치·경제관계에 있어서 중심적 조직체로서 그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우리는 흔히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과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통합이 우리에게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세안의 주된 창설 배경이었던 안보적 위협과 그에 대한 아세안의 성공적인 대응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동남아시아는 남남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경제 협력이 꾸준히 증대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적 관심이 큰 것은 당연하다. 반면에 안보 영역에 있어서 동남아와 동북아는 지역적 격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략 환경이나 안보관심사의 차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탈냉전과 더불어 아세안이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안보전략들 가운데는 우리의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아세안의 실효성 있는 접근법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아세안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1994년에 출범한 아세안지역 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은 아·태지역 최초의 공식적 다자안보협의체로서 한반도문제까지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7월 북한도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안보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대되고 있고, 1995년에 체결된 동남아비핵지대(SEANWFZ,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조약은 북한핵문제 및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적지 않은 함의(implication)를 던져 주고 있다. 또한 냉전상황에서 인도차이나 공산권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창설된 아세안이 탈냉전과 더불어 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등을 차례로 회원국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역내국가간의 전쟁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냉전이후시대에 새로운 안보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공동전선을 형성하면서 강·온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 분단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이 냉전이후시대에 아세안이 구사하고 있는 지역안보전략은 우리의 안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전략들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주는 함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아세안의 안보전략을 구체적인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평가해 보고, 그것이 한국안보를 위해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찾아봄으로써 21세기 한국안보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른 아세안의 지역안보전략의 구체적 대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규명하여 평가해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먼저 아세안의 지역안보전략에 대한 규명인데, 그 배경요인이 되고 있는 동남아 및 아·태지역 전반의 안보환경이 탈냉전과 더불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고 난 후,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아세안 안보전략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아세안의 안보전략이 과거와 어떠한 면에서 연속성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에 주목하면서, 상당히 입체적이면서도 상호연계성을 갖고 있는 안보전략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아세안이 채택한 주요문서, 즉 동남아 자유·평화·중립지대(ZOPFAN,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선언,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비핵지대조약, ARF 의장성명 및 컨셉페이퍼(concept paper),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회의의 결의문과 성명서 등을 중심으로 아세안의 안보전략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아세안의 지역안보전략이 탈냉전환경과 새로운 지역안보이슈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유용성을 갖고 있는가를 거시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한국안보를 위한 전략 선택 가능성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아세안의 다양한 안보전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국안보를 위한 함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선 동남아와 동북아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격차와 연계성, 안보환경과 안보이슈의 차별성과 공통성 등을 검토하고 난 후, 결론적으로 아세안의 전략이 한국안보를 위해서 시사하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탈냉전과 전략환경의 변화

탈냉전시대에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안보전략은 냉전시대의 그것과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동남아 및 아·태지역의 전략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안보환경의 변화는 아세안의 안보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 먼저 지적 할 수 있는 것은 세계적인 냉전종식이 동남아 및 아·태지역의 전략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이 지역의 국제관계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1991년 캄보디아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이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간의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아세안과 인도차이나 국가들간의 관계도 급속히 개선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냉전시대에는 이념적 갈등과 강대국간 경쟁으로 특징 지워지는 비교적 단순한 관계구조를 갖고 있던 이 지역이 소련의 붕괴와 미·소간 전략적 경쟁관계의 해소, 인도차이나와 아세안, 미국과 베트남, 러시아와 아세안, 중국과 베트남 등의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보다 복잡한 관계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새로운 질서 형성을 둘러싸고 역내 및 역외 행위자간의 협력과 갈등을 벌이게 되었다.

다음으로 소련의 붕괴와 필리핀에서의 미군철수 등 미국 군사력의 감축으로 인한 힘의 공백을 계기로 중국·일본·인도 등 지역강대국들(regional powers)의 군사력 증강과 패권경쟁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와 새로운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는 이 지역의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국내문제로 인하여 영향력의 행사에는 상당한 제약을 안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과 중국은 그들의 경제적·군사적 잠재력 때문에 아세안의 안보적 고려의 초점이 되어 왔다. 경제대국 일본은 탈냉전과 더불어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적 역할을 추구해 왔는데, 아세안은 다자주의적 틀 속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독립적인 군사적 역할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또한 아세안은 중국의 지속적인 군비현대화 및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져 올

군사적 결과에 대해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은 실제로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아세안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거대한 중국의 힘이 명백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Taylor 1996, 12).

특히 아세안은 탈냉전과 더불어 현재화(顯在化)되고 있는 남중국해 도서영유권 분쟁 및 이와 관련하여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중국의 남진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파라셀(Paracel), 스프라틀리(Spratly)군도에 대해서 중국·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이 전면적 또는 부분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지역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의 확대선언에 따른 충돌가능성이 증대되어 왔고, 실제로 분쟁당사국간에 잦은 충돌을 빚고 있어서 이 지역 최대의 불안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엄청난 경제적, 전략적 가치와 분쟁당사국들의 완고한 입장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영유권분쟁이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남중국해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해·공군력의 강화를 통한 남진정책은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이고 이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역외 강대국에게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sup>1)</sup> 중국의 남진정책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권의 보호 및 점증하는 해양으로부터의 위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를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1990년대초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와의 협력관계가 증진됨으로써 4,300km에 달하는 중·러국경지역에 대한 위협이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수호는 물론이고 미·일간의 신안보동맹체제의 형성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으로 인하여 중국의 해양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일 신안보동맹체제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경제력을 이용하여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이들과 정치안보적 협력까지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향후 일본이 이 지역 최대의 적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

1) 중국의 남진정책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전개양상 및 이에 대한 아세안의 인식과 대응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변창구(1999<sup>b</sup>, 155-187)을 참조할 것.

다(Manning 1994, 48-51). 그 결과 이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세안과 중국, 중국과 미·일 및 아세안과 미·일간의 갈등과 협력은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동남아 안보의 최대 시험대가 되고 있다.

한편 탈냉전으로 인한 안보 개념의 광역화도 아세안에게 새로운 지역안보 접근법을 요구하였다. 자본주의의 범세계적 확산과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의 심화는 전통적인 군사적 안보 못지 않게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내지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개념에 입각한 경제·환경·인권·난민·테러·마약·밀수 등 비군사적 안보의제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소위 군사안보의 핵심적 속성인 전쟁과 같은 '고강도 분쟁'(high intensity conflict)이 아니라 비군사적 안보의제와 관련한 '저강도 분쟁'(low intensity conflict)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의제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EU와 NAFTA 등 지역주의의 심화와 WTO의 출범에서 알 수 있듯이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아세안이 중시하고 있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관점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커다란 도전으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이 아세안은 탈냉전으로 인하여 캄보디아분쟁과 인도차이나 공산권의 위협이라는 공동의 안보관심사가 사라진 상황에서 아세안의 결속력을 유지하면서 남중국해분쟁과 중국의 남진정책 및 새로운 지역질서 형성을 둘러싼 역외 강대국간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라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새로운 안보관심사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겠다.

### III. 아세안의 대응과 지역안보전략

#### 1. 아세안의 확대와 탄력성 강화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아세안의 전략은 우선 '탄력성'(resilience)<sup>2)</sup>의 강

화를 위한 아세안의 확대에 나타나고 있다.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통합된 동남아시아의 잠재적인 전략적 중요성이 아세안으로 하여금 회원국의 확대를 촉진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세안의 입장에서는 인도차이나 국가들과의 많은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전략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아세안은 인도차이나 국가들을 차례로 TAC에 참여시키고 읍저버 지위를 부여하여 회원국으로서의 적응과정을 거친 후에 정회원국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가입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시켰는데, 1999년 4월 30일 마침내 캄보디아가 최종 가입함으로써 창설 30여년만에 동남아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소위 '아세안-10'을 실현시키게 되었다.

아세안 확대의 구체적인 과정과 그 안보적 의의를 살펴본다면, 우선 아세안은 동남아의 군사최강국 베트남을 가입시킴으로써 아세안의 '지역적 탄력성'(regional resilience)을 강화하고 베트남을 최전선에 두게 됨으로써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냉전시대 인도차이나 맹주(盟主)였던 베트남의 가입은 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까지 자연스럽게 확대시켜 나가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아세안은 미얀마를 가입시킴으로써 미얀마의 친중국화를 저지하고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미얀마의 군사정권을 공개적으로 옹호해 온 중국은 미얀마에 1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공급하고 UN에서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불리한 어떠한 조치에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인권문제로 인해 서방측으로부터 고립된 미얀마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동남아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구해 왔다(배궁찬 1997, 11). 아세안은 바로 이같은 중국의 동남아침투를 견제하기 위하여 미얀마와 라오스를 동남아의 일원으로 끌어들이었으며, 캄보디아사태로 인한 서방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1999년 4월 마침내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지역적 탄력성을

2) 아세안의 탄력성 개념은 “강인성과 불굴의 의지를 포함하는 한 국가의 동적 조건(dynamic condition)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국가적 탄력성(national resilience)과 지역적 탄력성(regional resilience)으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창구(1987, 82-84)를 참조할 것.

강화하고 대중국견제력을 증대시켰다.

이와 함께 아세안은 지역적 탄력성 강화를 위하여 ‘하나의 동남아’(One Southeast Asia)라는 공동체의식에 기반을 둔 또 다른 장기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은 1994년 5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차 아세안 비공식회의를 통하여 ‘Southeast Asia beyond the Year 2000: A Statement of Vision’<sup>3)</sup>이라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동남아지역이 ‘하나의 운명’(shared destiny)공동체로서 향후 ‘21세기를 지향하는 정치·경제·문화적 공동체’<sup>4)</sup>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세안의 확대 및 강화, ARF에 전체 동남아국가의 참여 유도, 동남아국가 정상회담의 정기적 개최 필요성 등 정치분야와 AFTA의 조기 완결, 여타 동남아국가들의 AFTA 참여 등 경제분야에서의 지역통합방향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제안들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아세안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하나의 동남아시아’ 건설을 위해 ‘아세안-10’이라는 외연적 확대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걸맞은 내면적 통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정상회담의 정례화, AFTA의 조기완결 및 메콩강 개발계획 등을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이러한 아세안의 노력은 동남아 지역통합의 범위와 수준을 빠른 속도로 진전시켰으며 민간차원에서의 인적교류 및 인력이동도 크게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동남아 전체가 하나라는 공동체적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외부적으로는 동남아지역이 하나의 독립된 지역통합체로서 대외협상력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나아가 아세안은 동남아공동체 구상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하여 1997년 12월 창설 30주년을 기념하여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비공식정상회의에서 ‘아세안 비전 2020’(ASEAN Vision 2020)이라는 선언문을 채택하여 지역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선언에서는 4가지의 대주제, 즉 ‘동남아제국의 협조’(A Concert of Southeast Asian Nations), ‘역동적 발전 속의 동반자관계’(A

3) 이 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Southeast Asia beyond the Year 2000 : A Statement of Vision*, Manila, May 31, 1994. 참조.

4) 아세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원칙으로서 국가적·지역적 탄력성(national and regional resilience), 다양성 속에서의 일체성(unity in diversity), 공동의 국가이익(common national interests), 및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등을 제시하고 있다.



Partnership in Dynamic Development), '온정 있는 사회공동체'(A Community of Caring Societies), '대외지향적 아세안'(An Outward-Looking ASEAN) 등을 중심으로 각 주제별 세부실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적 결속을 다지고 있다(ASEAN Vision 2020, 1997).

## 2. 다자안보협력의 추진

아세안은 탈냉전으로 인한 불안정한 지역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새로운 안보관심사들을 다루는 협력안보전략의 하나로서 다자안보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왜냐 하면 다자간 안보협력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대화의 습관을 축적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국제적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안보적 위협을 해결함에 있어서 민주적 협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상충된 이해를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다자주의에 기초한 협력안보체제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이 체제하에서는 참가국들에 의해 합의된 규범과 설립된 절차의 범위 안에서 갈등이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Nolan 1994, 5), 특히 탈냉전시대에 최대의 안보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남중국해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국간의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과 갈등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아세안은 공식(Track I) 및 비공식(Track II)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여 왔는데, 그 대표적인 메커니즘은 인도네시아의 주도로 1990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잠재적 갈등처리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the Managing Potential Conflicts in the South China Sea)과 1994년에 창설된 ARF이다.<sup>5)</sup>

비공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남중국해 워크숍의 목적은 분쟁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어서 신뢰구축을 발전시키고 평화적

5) 남중국해분쟁과 관련한 아세안의 다자주의적 접근정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서는 변창구(1998, 137-167)을 참조할 것.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중국해 연안국가들 사이에 협력의 관행을 축적해 나가는데 있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대만 등 7개국과 태국 등 4개 관련국의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정부나 군의 관료·학자·여론 형성자·과학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워크숍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 동안 다자주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중국이 1991년 2차회의부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중국이 참여하게 된 것은 이 회의의 과정은 ‘지역문제에 대한 지역적 해결’(regional solutions to regional problems)을 추구함으로써 다자간 대화가 미국이나 일본 등 역외 국가들의 개입으로 국제화될지도 모른다는 중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이 워크숍에서는 지역의 평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어 왔는데, 1992년에는 ‘남중국해에 대한 아세안선언’(ASEAN Declaration on the South China Sea)<sup>6)</sup>을 통하여 남중국해 연안국가들의 행동준칙을 마련하였고, 1994년의 제5차 워크숍에서는 그 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다양한 신뢰구축조치들이 논의되었으며, 1997년에는 남중국해에 있어서 과학적 협력프로젝트의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분쟁당사국간의 신뢰구축을 모색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나아가 아세안은 1994년 아·태지역 최초의 공식적 다자안보대화체인 ARF를 출범시킴으로써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있다. 아세안이 ARF를 창설하여 다자간 안보대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안보의 성격 변화, 전략환경의 변화 등 전반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미국과 러시아의 후퇴에 따른 중국의 남진정책과 남중국해분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7)</sup> 이러한 사실은 말레이시아 외상 바다위(Abdullah Badawi)가 ARF창설과정에서 “잠재적인 경제적, 정치적 초강대국인 중국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중국이 지역문제에 건설적으로 개입한다는 것

6) 이 선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ASEAN Declaration on the South China Sea*, Manila, Philippine, July 22, 1992. 참조.

7) ARF의 창설배경 및 진전과정, 구조와 성격, 다자안보대화체로서의 가능성과 한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변창구(1997, 245-272)를 참조할 것.

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이익이 될 수 있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3/06/23, 13)고 중국의 참여를 강조한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세안은 다자주의적 틀을 통하여 지역안보에 위협을 초래할지도 모를 중국을 대화의 과정에 끌어들이므로써 협력적 행동패턴을 가지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Yahuda 1996, 285).

그 동안 ARF는 Track I 과 Track II 차원의 다양한 공식, 비공식회의를 통하여 남중국해분쟁과 관련한 많은 논의를 해왔는데, 중국이 점차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다자안보대화에 대한 기대를 증대시키고 있다. ARF회의를 결산하는 의장성명을 보면 항상 남중국해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최근에 개최된 제6차 ARF회의에서도 중국을 포함한 참가국들은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법과 유엔해양법규약에 따라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할 것을 거듭 확인하였으며, 중국은 특히 현재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있어서 지역국가들의 ‘행동규약’(code of conduct)의 제정 노력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Chairman's Statement, 1999).

### 3. ZOPFAN과 비핵지대전략

아세안의 ZOPFAN전략은 이 지역에서 냉전이 한창이던 1971년에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은 아니며, 전략환경이 변한 탈냉전시대에 이 전략이 갖는 유용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없는 것도 아니다.<sup>8)</sup> 그러나 아세안은

8) 탈냉전시대에 있어서도 ZOPFAN전략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지 않다. 아라카파(M. Alagappa)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이 강조되고, 높은 상호의존적 관계로 특징 되는 오늘날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ZOPFAN화 구상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중립화를 통한 평화보다는 지역협력을 통한 평화 및 법치주의를 통한 평화의 접근이 보다 적실성을 갖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Alagappa 1991, 289-303) 그러나 드즈와도노(J. S. Djihadono)는 탈냉전시대에도 여전히 이 지역국가들은 강대국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 지역의 국내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잠재적 갈등들은 외부간섭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는 새로운 안보문제가 대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ZOPFAN전략의 유용성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Djihadono 1991, 127-128).

전략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의 가치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탈냉전환경을 이용하여 ZOPFAN의 연장선에서 동남아 비핵지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92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아세안정상회의는 냉전종식으로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국제정치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숙의하였는데, 당시 ZOPFAN워킹그룹은 “ZOPFAN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적절한 전략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정상들은 “아세안은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유의하면서 우호적인 국가들과 협의를 통하여 ZOPFAN과 동남아비핵지대의 실현을 추구한다”(Straits Times, 1992/01/29)고 천명함으로써 이 지역의 ZOPFAN화와 비핵지대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거듭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는 탈냉전으로 인한 지역질서의 불확실성 및 점증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지역패권경쟁과 관련하여 평화적이고 중립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아세안은 본격적인 탈냉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ZOPFAN화의 필수적 요소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어 온 동남아 비핵지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sup>10)</sup> 즉 1991년 이른바 ‘부시 이니셔티브’(Bush Initiative)로 알려진 부시(G. Bush)대통령의 미국 해외배치 지상발사 단거리핵무기의 철수발표 및 슈빅만에서의 미군기지 철수 등 긍정적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비핵지대화 추진전략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핵무기가 미국과 러시아만이 아니라 지역적 행위자들(regional actors)을 포함한 중급 국가들(middle powers)간에도 확산됨으로써 더 큰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sup>11)</sup> 특히 동남아지역은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어떤 형태의 핵실험도 지역국가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993년 10월 이후 지속된 중국의 핵실험은 동남아 비핵지대화의 필요성을 증대

9) *Programme of Action for ZOPFAN*, Special Meeting of ASEAN Senior Officials, March 7-9, 1994, Bangkok, p.1.

10) 아세안의 동남아의 ZOPFAN화 및 비핵지대전략의 구체적인 진전과정에 대해서는 변창구(1999\*, 151-180)을 참조할 것

11) “ASEAN Political Security Measures Through TACSEA and SEANWFZ”, in *Philippine Discussion Paper*, 1994, p.3.

시켜 주었고, 1995년 5월 12일 NPT의 무기한연장 결정이후 남태평양지역에서 시행된 프랑스의 핵실험 재개도 비핵지대조약체결 논의를 촉진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The Star, 1996/05/03).

이러한 사태의 진전으로 아세안은 당시 동남아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비핵지대조약 체결을 위한 본격 협상에 착수하였고, 두 차례의 실무그룹회의를 거쳐서 1995년 9월 21일 조약초안의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어서 동년 12월 25일 방콕에서 개최된 제5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들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모든 동남아국가들에 의해 역사적인 ‘동남아 비핵지대조약’<sup>12)</sup>이 체결됨으로써 아세안의 비핵지대전략은 일단 지역국가들간의 결속과 신뢰구축이라는 일차적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기존 핵보유국들이 이 조약의 부속의정서에 대한 서명을 유보함으로써 비핵지대의 실제적 효력을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부속의정서에 대해서 5대 핵보유국이 아직 서명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 효력을 발휘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약의 체결 자체가 아세안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강대국의 핵의 인질로부터 벗어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강대국과의 협상성과에 따라서는 실질적 효력의 발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4. 역외 안보외교의 강화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아세안의 안보전략은 역내적 차원과 역외적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역내적 차원에서는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주로 지역적 탄력성의 강화를 위한 회원국간의 정치·경제적 협력과 자체 군사력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역외적 차원에서는 불확실한 지역질서를

12) 이 조약 및 부속의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reaty on the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Bangkok, December 15, 1995. ; *Protocol to the Treaty on the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Bangkok, December 15, 1995.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자안보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서방 강대국과의 안보외교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아세안의 전략은 자체군사력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을 개입시켜 이 지역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함으로써 중국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Gallagher 1994, 184). 더욱이 최근 아세안은 지속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자체 군사력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서 중국과의 군사력 격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세안은 역외 강대국과의 안보협력력을 점차 강화시켜 왔는데, 우선 싱가포르는 1992년 필리핀의 미군기지 철수 이후 '군사시설 이용 증대에 관한 각서'에 따라 미공군과 해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이후 현재까지 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가 항만과 활주로 또는 군훈련장소를 제공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필리핀까지도 다시 미국에 군사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1998년 11월 현재 공사중인 새로운 해군기지를 미국이 사용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미함모 칼빈슨(Carl Vinson)호가 이끄는 일단의 전함들이 싱가포르에 최초로 기항하도록 하였다(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8/12/03). 또한 인도네시아는 1992년 6월 국영조선소에서 미해군의 함정을 보수해주는 협정을 맺었으며, 1995년 12월에는 중국과 영유권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투나제도(Natuna Islands)의 천연가스전을 지키기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와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공중조기경보기·인공위성·장거리추적레이더 등에 의한 전략적 수준의 감시체계구축을 모색하고 있다(Whiting 1997, 299-300).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영연방의 일원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와 함께 '5개국 방위협정'(FPDA, Five Powers Defence Arrangement)을 체결하여 자신의 안보를 도모해 왔는데, 1997년 4월에는 중국의 남진과 관련하여 남중국해에서 군함과 전투기를 동원한 사상 최대의 모의 공중 및 해상전투를 실시한 바 있다(조선일보, 1997/04/13). 이 훈련은 2차대전 이래 동남아시아에서 실시된 워게임(war game)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이를 통해서 새로운 전쟁전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필리핀 역시 “만약 스프라틀리분쟁이 확대되고 중국이 우리를 침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가?”(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8/08/04)라고 한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대통령의 인식처럼, 중국의 위협 증대에 따라 역외 강대국과의 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필리핀은 1996년 1월 영국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방위정보의 교환 및 군사대표단의 필리핀 방문 등을 골자로 하는 양국방위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기존 미국과의 안보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1998년 2월에는 군대방문협정을 체결하였는데, 1999년 5월 의회 비준을 얻음으로써 7월에는 미군철수 이후 처음으로 미7함대가 다시 방문하는 등 상호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Muzi Lateline News, 1999/07/22).

물론 이러한 서방과의 안보유대 강화는 지금까지 아세안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의 ZOPFAN화 전략과 논리적 모순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탈냉전시대에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남진정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서방의 지원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세안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ZOPFAN 전략과 커다란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서방과의 안보협력전략으로서 과거 필리핀의 경우와 같은 군사기지의 제공보다는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을 모색해 오고 있다.

## IV. 아세안 안보전략의 특성 및 평가

### 1. 안보전략의 특성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아세안의 지역안보전략은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적 탄력성의 강화, 다자안보협력의 추진, 동남아의 비핵지대화, 역외안보외교의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전략들을 이해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각 전략들이 별개로 분리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단선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다층적 접근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장·단기 전략과 강·온 양면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등 의미 있는 전략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성 가운데 우선 전략 상호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아세안은 다양한 안보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전략 상호간의 연계성과 보완성에 유의하고 있다. 하나의 실 예로서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의 ZOPFAN화와 비핵지대화를 위해서는 지역적 탄력성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연계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아세안은 동남아의 ZOPFAN화나 비핵지대화가 단순한 하나의 선언이나 강대국의 법적 승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의 ‘국가적 탄력성’의 강화, 즉 국력의 성공적 발전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대내적 역량의 강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찍이 말레이시아의 전 라자크(T.A. Razak) 수상이 “중립화 제안의 전제는 국가적·지역적 탄력성이며, 동남아시아는 스스로 서야 한다”(Saravanamuttu 1984, 191)고 강조한 바와 같이 아세안은 ZOPFAN과 비핵지대화 실현의 기초로서 아세안의 확대와 동남아공동체의 건설, AFTA의 조기 완성 등 지역적 탄력성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세안의 안보전략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편으로는 역내안보환경을 개선하고 대외협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세안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지역적 탄력성의 강화에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자안보대화를 추진하고 역외 강대국과의 안보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팽창주의적 해양정책으로 인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체군사력 강화 및 서방과의 새로운 형태의 안보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탈냉전시대에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아세안이 전통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안보를 위하여 역내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동아시아경제협력의체(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의 추진, APEC의 사무국 유치 등 역외경제외교를 강화하여 왔다. 특히 경제안정과 발전은 국가적, 지역적 탄력성 강화의 핵심적 조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전쟁시대에 아세안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전략에 대한 그들의 비상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이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보전략은 강·온 양



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탈냉전시대에 이 지역 최대의 안보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완고한 영유권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방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아세안은 중국의 군사적 도발과 압력에 대처하는 현실적 수단은 군사력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해군력과 공군력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력의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sup>13)</sup> 또한 이러한 군사력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자체 힘의 한계를 인식하고 서방 강대국들과의 합동군사훈련, 군사기지 사용협정 또는 군대방문협정의 체결 등 군사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중국과 양자간 및 다자간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남중국해 워크숍이나 ASEAN-PMC 및 ARF와 같은 다자안보협의체를 통한 대화는 물론이고, 아세안과 중국간의 고위관료회의, 아세안과 대화파트너간의 10+1회의 등 공식적인 양자간 대화메커니즘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적 양자간 대화를 통하여 남중국해의 평화적 이용과 분쟁당사자간의 신뢰구축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아세안의 접근방식은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현실주의(realism)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병행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끝으로 아세안의 안보전략은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전략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탈냉전이라는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냉전시대에 적대관계에 있었던 인도차이나 공산권을 아세안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창립 지도자들의 염원이었던 ‘하나의 동남아시아’를 향한 그 첫 단계를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핵군비통제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남아비핵지대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강대국의 핵인질로 부터 벗어나고 동남아의 ZOPFAN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아세안이 ARF를 창설하게 된 것 역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역질서 구축에 있어서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으며,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세

13) 최근 아세안의 군사력 증강실태에 대해서는 SIPRI(1998, 326-366) 참조

14) 이러한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결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Simon(1995, 5-24)를 참조할 것.

안은 지역적 탄력성과 대외협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AFTA의 완성연도를 앞당기는 등 적극적인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sup>15)</sup> 이처럼 아세안은 전략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안보전략에 대한 평가

전략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안보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아세안의 지역안보전략을 현 단계에서 평가해 본다면 자체의 문제점과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고 지역적 탄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아세안-10'을 완성하였으나 아세안의 확대에 따른 내적 결속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고, 동남아의 ZOPFAN 및 비핵지대화를 추진하면서도 현실적인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서방과의 안보유대를 다시 강화하는 것은 양자간의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며, 남중국해 영유권분쟁과 같은 주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남중국해 위크숍이나 ARF와 같은 다자안보대화 메커니즘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시대에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중층적 안보전략들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유용성을 갖고 있다. 우선 아세안의 확대와 지역적 탄력성 강화 전략은 이 지역에서 냉전적 대결구도를 청산함으로써 역내국가간의 분쟁가능성을 해소하였고, AFTA와 동남아공동체의 건설을 본격화함으로써 지역적 탄력성을 강화하여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대외협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물론 회원국의 확대에 따른

15) AFTA는 원래 1992년 싱가포르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993년을 시작연도로 하여 향후 15년, 즉 2008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년 9월 제25차 아세안 경제각료회의에서는 5년 단축하여 2003년에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1998년 12월 제6차 아세안정상회담에서는 역내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AFTA의 완성연도를 2002년까지로 또 다시 1년을 단축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후발개도국인 베트남은 2003년, 그리고 라오스와 미얀마는 2005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였다.(Straits Times, 1998/12/16)

이질적 요인의 증대가 통합의 질적 수준을 심화시키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아세안의 독특한 협력방식과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을 감안할 때 지역통합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대두할 가능성은 적으며, 확대에 따른 정치경제적 이점이 예상되는 장애 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Track I 과 Track II 수준에서 다양하게 추진되어 온 아세안의 다자안보전략은 탈냉전시대에 이 지역 최대의 불안정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는 남중국해분쟁에 대한 지역적·국제적 주의를 환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중국을 안보대화의 광장으로 끌어들이으로써 평화적 협의와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필리핀의 한 고위관료가 “중국과의 스프라틀리군도 외교의 목적은 중국의 남진을 방지하는데 있다. 나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그들이 대화의 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것”(FEER, 1995/12/28 & 1996/01/04, 18)이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아세안의 다자안보외교는 남중국해의 평화유지에 크게 기여해 왔다. 물론 현재까지의 다자안보대화는 영유권분쟁과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다자안보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분쟁당사국들은 물리적 힘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ARF나 남중국해 워크숍과 같은 다자안보메커니즘이 예방외교의 도구로서 갖고 있는 유용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아세안은 ‘합의외교기술’(art of consensus diplomacy)을 통하여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쉽게 다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안보문제의 해결에 보다 나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터득했던 것이다(FEER, 1995/11/30, 34 ; FEER, 1996/05/02, 20).

아세안의 ZOPFAN 및 비핵지대화전략 역시 강대국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접근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혹자는 냉전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ZOPFAN전략은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탈냉전으로 인한 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었고 이 지역에 대한 강대국들의 영향력 확대경쟁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전략의 가치는 결코 감소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아세안의 각종 성명서는 동남아의 ZOPFAN화가 그들의 일관된 정책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인식에서 1995년에 체결된 비핵지대조약은 인도네시아 외상 알라스의 표현처럼 “동남아의 ZOPFAN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Indonesia Times, 1996/08/08)로 평가 될 수 있다. 이 조약의 체결에 대해 당시 수하르트(Suharto) 대통령은 “나는 이 조약이 동남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다 강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Disarmament Diplomacy, January 1996)고 하였으며, 아세안 사무총장 싱(Ajit Singh)은 “평화롭고 안정된 동남아시아라는 목적을 성취해 나아가는 단계의 하나였다”(Indonesia Times, 1996/08/08)고 그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 조약의 부속의정서에 대해 5대 핵보유국이 서명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세안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조약의 체결은 강대국의 핵인질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고 안정된 동남아시아를 건설해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의 하나로서 조약 체결 자체의 의의가 적지 않다. 그리고 아세안은 이 조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핵강대국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전개하여 왔고, 핵강대국들의 태도도 점차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부속의정서에 서명하게 된다면 이 지역의 평화는 크게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 V. 한국안보를 위한 합의

### 1. 동남아와 동북아: 차별성과 공통성 및 연계성

아세안의 지역안보전략이 한국안보를 위해 어떠한 합의를 가지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남아와 동북아의 전략환경의 공통성 및 안보적 연계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편차와 안보관심사의 차별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두 지역의 차별성을 살펴본다면,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동남아지역의 대안보관심사는 남중국해분쟁과 관련한 중국의 위협인데 반해서 동북아지역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불안정과 관련한 북한핵 및 미사일개발문제이다. 동남아지역

에서는 미군의 철수와 러시아의 후퇴에 따른 세력 공백으로 인한 중국의 남진이 점차 가시화되어 왔는데 반해, 동북아지역에 있어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역학관계가 새로운 지역질서의 형성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위협과 관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안보전략에 있어서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체제불안정 및 그로 인한 위협과 관련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안보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와 같이 두 지역간에는 지역적 격차가 있고 안보관심사와 전략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통성도 적지 않으며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두 지역간의 안보적 연계성도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일간의 지역적 패권경쟁으로 인한 안보환경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는 아세안과 한국의 공동관심사이며, 아세안과 중국간의 남중국해분쟁과 같은 도서 영유권분쟁이 중·일간의 센카쿠열도, 한·일간의 독도를 둘러싸고 지속되어 왔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또한 아세안이 강대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비핵지대화를 추진해 온 것이나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우려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해 왔다는 사실 역시 공통의 안보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지역질서 형성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전환기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두 지역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탈냉전의 세계화시대에 있어서는 두 지역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어느 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바로 인접지역에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안보연계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실 예로 1997년 7월 동남아에서 시작된 외한위기가 바로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국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경제안보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처럼 두 지역간에는 안보관심사와 안보환경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공통관심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점차 안보연계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탈냉전시대에 전개되고 있는 아세안의 지역안보전략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 2. 한국 안보를 위한 합의

아세안의 다각적 지역안보전략은 한국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 이 가운데 우선 다자안보전략이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합의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보자. 아세안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ARF는 소위 ‘아세안방식’(ASEAN way)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의 성공적 지역협력의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아세안 방식은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무사와라’(musyawarah), 즉 공동협의(consultation) 정신에 입각한 합의(consensus)의 원칙에 기초하여 의미 있는 의견교환을 하는데 있으며, 오히려 지나친 법적 제도나 절차의 수립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sup>16)</sup> 아세안의 다자주의는 참여자간에 이루어지는 묵시적 합의와 관행의 축적이 명문화된 원칙이나 제도적 기반 못지 않게 실제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유연성과 비형식성 및 합의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협력적 다자주의’(cooperative multilateralism)라고 할 수 있다(Gill & Mak 1997, 1-7).

이러한 방식의 다자안보전략은 한반도와 동북아안보를 위하여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남북한의 대립과 불신 및 주변 4강간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교차하는 이 지역에서의 다자안보대화는 참여자 모두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합의제 방식이 되어야하며, 초기단계의 협력은 명문화된 원칙이나 제도의 확립 없이 신뢰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의견교환을 통한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급히 제도화된 공식적 다자안보협력의 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현재 가동 중에 있는 Track II 차원의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나 아·태안보협력협의회(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Track I 차원의 유연한 동북아 다자안보메커니즘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분위기의 조성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16)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Acharya(1995, 187-191) ; Tay & Talib(1997, 256) ; Almonte(1997-98, 81) 등을 참조할 것.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자안보협력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인 북한의 참여를 위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미 1994년 ARF의 출범 시에 강력한 참여의사를 보인바 있고, 1995년 이후에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 등을 통하여 계속 참여지지를 요청해 왔다. 그 연장선에서 북한은 금년 5월 19일에 개최된 ARF고위관료회의(ARF-SOM, Senior Official Meeting)에 또 다시 참여의사를 표명한데 대하여 참여국들은 이를 환영하였고, 드디어 7월에 개최된 ARF각료회의에서 통과, 정식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향후 북한의 ARF에서의 활동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Straits Times, 2000/05/20; Bangkok Post, 2000/07/28). 아세안이 중국을 ARF에 참여시켜 남중국해문제와 중국의 위협을 논의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북한의 ARF 참가를 계기로 NEACD에도 참가를 유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다자안보외교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1994년 5월 ARF-SOM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동북아다자안보대화(NEASE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의 구축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NEASED의 제안 이후 그 실현을 위해 관련국들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의지를 보여 주지 못했다.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4자회담에서 제외된 러시아와 일본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도 NEASED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4자회담과는 별개로 NEASED의 구체적인 목적과 의의를 명료화하여 관련국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1995년 제2차 ARF에서 NEASED와 같은 소지역적(sub-regional) 차원의 다자안보대화도 추진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아세안으로부터 NEASED의 성사와 NEASED와 ARF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세안의 동남아비핵지대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이다. 아세안은 장기적 안목에서 ZOPFAN과 비핵지대화 전략을 수립, 추진하였고, 탈냉전의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약체결로 연결시켰으며, 비핵지대를 보증 받기 위하여 국제여론의 조성과 함께 핵강대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전개함으로써

강대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주성을 증대시켜 왔다. 이는 북한핵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최근 민간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제한비핵지대’(Limited Nuclear Weapon Free Zone)<sup>17)</sup>의 설립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동북아제한비핵지대의 설립문제는 아직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에는 미국·중국·러시아 등의 핵보유 강대국들과 핵개발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일본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92년 2월에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동북아지역의 비핵지대화 문제는 그것이 비록 제한적인 성격의 것이라 할지라도 동남아지역의 경우와는 달리 기존 핵강대국들이 포함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지역국가들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하여 불신의 골이 깊다는 점에서 대단히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와 같은 강대국간의 패권경쟁과 핵의 인질로부터 벗어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취시켜야 할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북아 제한비핵지대가 비록 현재는 민간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장차 정부차원에서 논의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있어야 하겠으며, 이 경우에 우리는 아세안의 비핵지대 추진전략과 그 진전과정에서 발견되는 의의와 한계를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안보전략은 우리의 대북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세안은 탈냉전이라는 전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도차이나 공산권에 대한 화해와 포용정책을 추진하여 ‘아세안-10’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동남아지역의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나아가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서 지역적 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17) 동북아 제한비핵지대의 구상은 1991년 12월 미국 조지아(Georgia)공대의 ‘국제전략·기술 및 정책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Strategy, Technology & Policy)의 소장이며 동북아 안보문제 전문가인 엔디코트(Jone E. Endicott)에 의해 제안되어 민간차원에서 학술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 동안의 논의는 다소 성과를 거두어 1996년 3월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의 정서를 발표하였고, 동년 10월에는 보르도(Bordeaux)의 정서가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차원의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면서 점차 정부차원의 협의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최상진(1997, 32-55) 및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7/08/29)를 참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은 다소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식과 방향은 견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현재의 포용정책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추진방법과 속도를 적절히 보완, 조정한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70년대 독일이 동방정책(Ostpolitik)을 추진했던 상황이 현재의 한국 보다 결코 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화해·협력정책의 결과 오늘의 통일 독일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는 한반도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북연착륙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대북포용정책을 견지함으로써 이들과의 협력 하에 적극적인 남북한 평화공존의 길을 열어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아세안 안보전략의 특성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안보전략도 전략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민첩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안보전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비록 북한이라는 어려운 상대가 있기는 하지만 탈냉전으로 인하여 동북아의 전략환경은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4강외교를 전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탈냉전시대의 한국안보는 양자동맹이나 다자안보협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상호보완관계속에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경제안보와 정치·군사안보의 연계전략이 면밀히 연구, 추진되어야 한다.

## VI. 결 론

이상의 논의에서 대체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탈냉전시대에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다층적이고 유연성 있는 지역안보전략들은 동남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함의를 던져 주고 있다.

아세안이 장기적 안목에서 안보전략을 강구하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전략환경의 변화를 기민하게 활용하는 적극적 대응자세는 동북아시아의 환경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자세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아세안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자안보대화가 남중국해분쟁의 안정적 관리와 이해관계 당사국간의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남북한 및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신뢰구축과 평화유지를 위해서 기존의 다자안보대화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공식적 다자안보레짐의 구축을 위하여 북한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아세안의 장기적 목표인 동남아시아 ZOPFAN화의 핵심적 요소로서 추진되고 있는 비핵지대화 전략은 비록 여건이 동남아 보다 어렵고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룩하고 핵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략상 호간의 유기적 연계성과 상호보완성에 대한 고려, 정치군사안보와 경제안보전략, 지역적 탄력성과 역외안보외교, 강·온양면전략의 병행 등은 우리의 안보전략이 보다 세련되고 정교화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물론 동남아와 동북아는 전략환경이나 지역국가들의 안보관심사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아세안은 국가연합체로서 집단적 안보외교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한국외교와 다른 점이 많다. 또한 탈냉전시대에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안보전략의 한계성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세안의 안보전략으로부터 한국안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이러한 유용성과 한계, 차별성과 유사성 및 두 지역간의 안보연계성에 유의하면서 아세안의 경험을 한국안보에 원용하는 구체적인 지혜라고 하겠다. 한반도 주변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안정되어 있으며, 4자회담과 북·미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남북한간에도 금년 6월 13일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경제협력이 증대되는 등 세계적 탈냉전의 영향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것

은 우리들의 몫이다.

## 참고문헌

- 김기정·박한규, 1998, “21세기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국의 전략”,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논문집』.
- 배금찬, 1997, 『ASEAN회원국 확대동향 및 발전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변창구, 1999<sup>a</sup>, 『아세안과 동남아국제정치』, 서울: 대왕사.
- , 1999<sup>b</sup> “중국의 남진정책과 아세안의 대응”, 『동남아시아연구』, 제8호.
- , 1998, “남중국해분쟁과 아세안의 다자주의적 접근: 유용성과 한계”, 『국제정치논총』, 제37집 3호.
- , 1997, “탈냉전과 아세안의 다자안보대화: ARF의 현황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36집 2호.
- , 1987, 『ASEAN 안보론』, 서울: 형설출판사.
- 이서함, 1998, 『동북아 비핵지대 설립타당성 연구』,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최상진, 1997, 『비핵지대의 확산과 동북아 제한비핵지대 설치안』, 서울: 세종연구소.
- Acharya, Amitav, 1995, "ASEAN and Asia-Pacific Multilateralism: Managing Regional Security", in Amitav Acharya & Richard Stubbs, (ed.), *New Challenges for ASEAN*, Vancouver : UBC Press.
- Alaggapa, Mathiah, 1991, "Regional Arrangements and International Security in Southeast Asia: Going Beyond ZOPFA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12, No.4.
- Almonte, Jose T., 1997-98, "Ensuring Security the ASEAN Way", *Survival*, Vol.39, No.4.
- ASEAN Declaration on the South China Sea*, Manila, Philippine, July 22, 1992.
- "ASEAN Political Security Measures Through TACSEA and SEANWFZ", in *Philippine Discussion Paper*, 1994.
- ASEAN Vision 2020*, Kuala Lumpur, December 15, 1997.
- Bangkok Post*, July 28, 2000.
- Chairman's Statement*, 1999, The Sixth Meeting of the ASEAN Regional Forum, Singapore, July 26.
- Disarmament Diplomacy*, January 1996.
- Djiwadono, J. Soedjati, 1991, "ZOPFAN: Is It Still Relevant?", *Indonesian Quarterly*, Vol.21, No.2.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y 2, 1996.

\_\_\_\_\_, December 28, 1995 & January 4, 1996.

\_\_\_\_\_, November 30, 1995.

\_\_\_\_\_, June 24, 1993.

Gallagher, Michael G., 1994, "China's Illusory Threat to the South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1.

Bates Gill, & J. N. Mak(ed.), 1997, *Arms, Transparency and Security in  
Southeast Asia*,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Indonesia Times*, August 8, 1996.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December 3, 1998.

\_\_\_\_\_, August 4, 1998.

\_\_\_\_\_, August 29, 1997.

Manning, Robert A., 1994, "Burdens of the Past, Dilemmas of the Future:  
Sino-Japanese Relations in the Emerging International System",  
*Washington Quarterly*, Vol.17, No.1.

*Muzi Lateline News*, July 22, 1999.

Nolan, Janne E., 1994, *Global Engagement :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ions.

*Programme of Action for ZOPFAN*, Special Meeting of ASEAN Senior Officials,  
March 7-9, 1994, Bangkok.

*Protocol to the Treaty on the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Bangkok, December 15, 1995.

Saravanamuttu, J., 1984, "ASEAN Security in the 1980s: The Case for a  
Revitalized ZOPFA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6, No.2.

SIPRI, 1998, *SIPRI Yearbook 1998*, Stedckholm: Oxford University Press.

*Southeast Asia beyond the Year 2000 : A Statement of Vision*, Manila, May 31,  
1994.

*Straits Times*, May 20, 2000.

\_\_\_\_\_, December 16, 1998.

\_\_\_\_\_, January 29, 1992.

Tay, Simon S. C. & Talib, Obood, 1997, "The ASEAN Regional Forum :  
Preparing For Preventive Diplomac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19, No.3.

Taylor, Robert, 1996, *Greater China and Japan : Prospects for an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London : Routledge.

*The Star*, May 3, 1996.

*Treaty on the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Bangkok, December 15, 1995.

Whiting, Allen S, 1997, "ASEAN Eyes China: The Security Dimension", *Asian Survey*, Vol. X X X VII, No.4.

Yahuda, Michael, 1996,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Asia-Pacific, 1945-1995*, London : Routledge.

# ASEAN's Regional Security Strategies in the Post-Cold War Era

—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ecurity —

Byun Chang-Ku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unravel elements of ASEAN's security strategies in the post-Cold War era, and to examine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security.

ASEAN's security strategies are the expansion of its membership for stronger regional resilience, ZOPFAN(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NWFZ(Nuclear Weapon Free Zone) in Southeast Asia, and strengthening of security relations with major powers outside the region. These strategies are not only mutually compensatory but also resilient to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the region.

ASEAN's strategie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ecurity order to ease tensions and build confidence between the two Koreas, imperative to establish a system of relations, which ensure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regard, ASEAN's strategies have 3 important implications to the security on the Peninsula.

First, the ARF(ASEAN regional Forum) can be a good case for the realization of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As the two Koreas gain mutual trust and ease tensions and animosities as time passes,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North Korea to participate actively in other security mechanisms such as NEACD(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in the

future.

Second, ASEAN's policies of ZOPFAN and NWFZ can be good model for Koreans given weapon proliferation remains a major issue in the region.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s well as missile programs impede peace in the region. In this context, ASEAN's endeavors to establish ZOPFAN and NWFZ can be a good example for the realization of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in Northeast Asia.

Third, ASEAN's adoption of engagement policy toward Indochina Communist bloc and its virtual rapprochement with them shows that engagement and enlargement rather than gunboat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desirable in the post-Cold War era. Simply put, close cooperation between Pyongyang and Seoul are imperative to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Once these processes have been materialized, peace is certain to prevail.

<Keywords>

ASEAN, ARF, ZOPFAN, NWFZ, resilience, engagement.